

2004년 IMF 연례협의단의 한국경제보고서

(2004. 10. 28)

※ 이 보고서는 2004.10.13~26일중 한국을 방문한 IMF 협의단이 정부, 연구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우리 정부에 제출한 한국경제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외환위기 이후 장기호황을 누렸던 한국경제는 2003년 상반기에 성장이 정체된 후 하반기에 다시 살아나다가 2004년 상반기에 연 2.75% 정도로 성장세가 다시 약화되는 stop-go식의 불규칙한 성장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성장패턴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경로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한국이 직면한 정책 과제들이며, 이번 IMF 협의단이 분석하려 하였던 주된 의제임

1. 한국경제의 문제점(What is the problem?)

-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의 경제성장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됨. 2003년 하반기에 한국경제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중심의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금년 들어 세계경제의 성장속도가 주춤함에 따라 수출 증가세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
- 국내수요는 지난 2년동안 침체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2001~02년중 발생한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신용팽창의 결과임
 - 가계는 GDP의 62%에 달했던 부채규모를 종전의 45%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축소(이것은 가계부채가 GDP대비 45%로 떨어져야한다는 뜻은 아님. 가계는 1998년 이전에 비해 은행 용자에 더 접근이 용이했으므로 균형 부채수준이 증가했음. 다른 국가들의 신용팽창-붕괴(credit boom and bust)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채는 현재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질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인하여 투자여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대기업들은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기피

→ 실제 경제상황에 비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과 함께 국내성장 엔진의 점화 즉, 가계,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지출 확대가 필요함

- 지난 2년 동안의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성장엔진이 재가동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른 국가들의 신용 팽창-붕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가계 저축률 증가속도는 2005년부터 둔화되면서 소비가 점차 회복될 전망

- 더욱이 대기업의 높은 수익성, 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 외환위기 이후 강한 시장중시체제 구축 등 양호한 경제여건도 한국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IMF 협의단은 향후 한국경제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확신하며

- 정확한 회복 경로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금년도 성장전망치에 대해서는 3/4분기 GDP가 공표되고 건설경기 진작규모 및 시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확정되면 재검토하겠지만 내년에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반적인 방향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제회복이 빠르고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 민간부문, 학계 등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IMF 협의단은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함. 이들 중에는 단기에 실행 가능한 것도 있고, 자신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작은 빨리 할 수 있지만 실행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음. 놀랍게도 많은 정책들이 이미 정부에 의해 취해지고 있고, 이는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우리가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이유이기도 함.

2. 향후 정책방향(What needs to be done?)

- ◆ IMF 협의단은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i) 거시경제 진작 ii) 가계부채 조정의 촉진 iii)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 iv) 기업투자 활성화 등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과제를 권고하고 있음

가. 거시경제 진작

- 국내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진작하는 것임

① 재정정책

- 국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정부예산안은 경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
는 여러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감면조치는 가계소득과 소비를
늘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재정의 조기집행 계획도 바람직함

- 그러나 내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금년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전체
재정기조는 대체로 경기중립적인 것으로 판단됨

(이 문제는 재정충격지수의 계산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 검토 필요)

- 이러한 점에서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GDP의
1%수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임

- 동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의 많은 부분이 민간자본 또는 국민연금
및 비예산재원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나 이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i) 첫째, 자금공급처(예: 국민연금)에 대해 과도한 정부보증 없이
적절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업베이스로 추진되어야 함

- ii) 둘째,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지출의 경우
통합재정계정에 반영되어야 함

iii) 셋째, 다양한 집단간의 이해조절로 인하여 실제 집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o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예년의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판단됨

② 통화정책

□ 따라서 당분간 거시경제의 조절 임무는 주로 통화정책에 부여되어야 할 것임. 통화정책의 주요 과제는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이 납득할만한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일임. 또한,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 수준(실질기준)은 마이너스임

o 그러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통화정책은 현재의 물가수준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감안할 때 6~8분기 이후의 물가수준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함

□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님

i) 식료품, 석유류, 수입품가격의 상승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고

ii) 근원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2.5~3.5%) 내에 머물러 있고

iii) 임금상승률도 둔화되고 있고

iv) 장기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으며

v) 주택가격 또한 안정되어 통화정책 제약요인이 되지 않고 있고

vi) 경기부진으로 실제 성장이 잠재성장을 하회하고 있어 향후 수개월간 물가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기조를 추가 완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③ 환율정책

- IMF 협의단은 환율정책에 있어서 시장개입은 smoothing operation으로 국한하고 원화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침을 지지함

나. 가계소비 조정의 촉진

- 확장적 거시정책이 경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경제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신용불량자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여러 국가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가계신용 붐의 붕괴 이후 회복속도는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회복이 즉각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약하게 서서히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잘 설계된 계획은 회복을 촉진시키고, 결단력 없는 방안들은 회복을 지체시킴
- 한국정부는 직접개입보다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 왔으며 IMF 협의단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함
 -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기피, 타 분야의 탕감요청 쇄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부채 탕감요구를 확고히 거부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함
- 그간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개인회생제도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신불자문제의 해결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i)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용불량자의 15%만이 해결되었음

- ii) 현행 제도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부담이 작고 소득이 안정적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이 불안정하고 부채를 갚을 기회가 적은 대다수의 신불자들이 이들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저소득자들은 다른 국가들에서처럼 파산법원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 구제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파산시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최저생활비로 생활해야 하는 채무변제기간이 8년임(미국은 3~5년)

① 개인회생제도의 보완·강화

- 부채부담이 크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개인회생제도 개선임

- 이 제도는 새로 도입된 탓도 있겠지만 요구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며 비용부담도 크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상태임

- 현재 면제재산의 범위를 늘리고, 회생기간 단축(8년→5년) 등의 간소화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예로서, (1998년에 수립된) 홍콩의 IVAs(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s)*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관련 당사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비공식 협정.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의 채무조정안을 중재자(주로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하고 중재자가 적절한 계획을 결정하며, 결정된 계획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를 연체의 재발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주고, 채무자가 불이행시 파산절차로 이행

② CB 설립의 가속화

- 가계의 부채문제 해결과 함께 가계의 신용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함
 -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계는 저축을 계속하고 소비가 되살아 나기는 어려울 것임
- 그들의 자회사인 신용카드회사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한 은행들로 하여금 가계에 다시 대출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회사(CB; credit bureau)의 설립이 필요함
 - 은행이 채무불이행 이외에 성실한 상환 기록 등 채무자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면 대출결정시 단순히 yes/no가 아닌 보다 세밀한 계산이 가능할 것이고
 -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개개인의 신용점수가 생성되고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도 높은 이자를 지불할 경우 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임
- CB 설립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조기에 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통한 주요한 목적은 채권자들이 신용에 대한 평가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 현재 금융기관들이 성실한 상환 기록과 같은 우량 신용정보(즉, 연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와 대조되는, 정상 상환한 대출 정보)를 신용평가회사와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아, 대출기관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이상적으로는 신용평가회사들이 이러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처리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수요가 있을 때 즉각 포괄적인 신용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이것이 다른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이러한 효율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멕시코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음 두 가지 규정만 갖추어지면 됨
 - i) CB에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은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가격에 다른 공인된 CB들에게 제공
 - ii) CB의 신용보고서가 없이 대출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높이는 등 금융기관들이 CB 신용보고서를 활용하도록 권장. 신용보고서를 얻는 대신, 금융기관들은 CB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이렇게 될 경우 광범위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CB는 금융기관의 요구에 맞게 정보를 처리·제공하는 능력에 따라 경쟁하게 될 것임
- 이러한 두 규정은 곧바로 마련되어야 함. 위의 두 규정을 반영한 계획이 일부 대형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이 그러한 투자를 한 후에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그들이 추진하는 CB설립 이전에 마련되어야 함

③ 부동산거래 위축의 완화

- 가계의 신용에의 접근을 회복하는 문제 이외에, 자산부문 문제 즉, 주택부문의 정책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함
 - 작년 10.29조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특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부동산거래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결과도 초래하였음
 - 그 결과 가계의 주요 자산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가계의 소비를 줄이는(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는 내년에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임
 - 이 경우 보유세가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부동산 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 투기억제의 효과가 있는 동시에, 부동산매도비용이 줄어들어 주택시장의 유동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

- 한국경제가 가계부채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당면과제는 중소기업 문제임
 - 제조업영위 중소기업의 약 1/5이 손실을 기록하고 1/3이상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더욱이 중소기업의 상당부분은 과거 신용 팽창시 차입을 크게 늘려 과중한 부채부담에 직면하고 있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실제 중소기업 상황은 더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중소기업문제는 경기순환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있지만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는데

이는 생산성 향상이 지체된 것에서 보이듯이, 구조조정이 대기업보다 부진한 것이 한 원인임

- 중소기업의 규모와 중요성 및 중국과의 극심한 경쟁에 놓여 있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한 대만 중소기업의 순이익률은 한국의 중소기업보다 2%p 정도 높은 수준. 아울러 대만의 중소기업은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여 매우 역동적임. 다시 말해서 대만기업가들은 기회가 생기면 빠르게 창업하고 시장상황이 바뀌면 신속히 회사를 정리함

① 신용보증제도의 축소 및 개편

- 이같은 양국간의 차이는 한국정부의 신용보증제도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만의 경우 정부 신용보증은 GDP의 1% 수준으로 한국의 1/4 수준에

그침. 이에 따라 대만의 은행들은 대출결정시 정부보증에 의존하기 보다는 보다 엄격한 스스로의 신용위험 평가과정을 거치게 됨

o 반면 한국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위주로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보증기간도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평균 5년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시장수요가 변하는 데도 불구하고 경쟁력 없는 전통산업의 중소기업이 연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음

□ 한국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신용보증 지원대상을 창업 및 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보증위주의 대출이 아닌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근거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전문CB 설립을 추진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IMF 협의단은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며 이러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주요한 개선요망 사항으로는

i) 우선, 은행의 신용분석기능 제고를 위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50% 수준까지 점차 낮추어 나가는 한편

ii) 신용보증의 기존 중견기업에 의한 독점현상 방지 차원에서 보증 만기를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필요

iii) 근본적으로는 신용보증규모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보증규모를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1%씩 줄여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 이 정책은 은행과 기업들이 계획을 세워서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발표될 수도 있음. 또한 필요한 구조조정의 작업들을 연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되어야 함

-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지금 당장은 중소기업이 처한 재정적 상황 때문에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투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채권자는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을 시작하거나 가속화 시키도록 해야 함
- 신용보증 축소는 신용경색을 초래하여 단기적으로 경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소지도 있으나
- IMF의 판단으로는 보증축소가 점진적일 뿐 아니라 은행이 현재 신용보증이 미래에 연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대출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원금의 85%는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당장 회수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 위험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② 중소기업 창업지원 활성화

□ 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캐피탈회사에 대해 과반수 지분 보유 및 경영권 인수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창업기업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비해 경영경험은 짧아 창업기업인들이 경영전문능력을 갖춘 벤처캐피탈회사의 과반수이상 지분 참여에 의한 경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 중소기업의 차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자산(예: 매출채권, 무형자산 등)에 대한 재산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 필요

□ 창업에 필요한 최소자본요건(3천만원[※]) 인하, 투자자들에게 복잡하고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는 토지이용관련 허가사항을(OECD는 112가지라고 함) 일괄 서비스해주는 체제를 갖추는 방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비용을 경감시킬 필요

※ 우리나라의 최소자본요건 3천만원은 1인당 국민소득의 2배 수준이나 OECD국가들 대부분은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 이하임

③ 통합도산법의 제정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퇴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도산법의 제정을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
 -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산기업의 경영자가 채권자의 승인 하에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기존경영진의 관리인 선임제도(debtor-in-possession system)”이 도입될 수 있을 것임

라. 기업투자 활성화

- 기업투자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시장 등에 대한 근본 개혁이 필요함
 - 최근의 기업투자 부진은 경기적 요인만의 문제는 아님. 설비투자 규모는 지난 92년 GDP의 15% → ‘04년 9.5%로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과거 과잉투자를 장려하던 데서 벗어나 수익성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시스템이 전환된데 따른 현상이기도 함
 - 그러나 한국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가 부족한 근본 이유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자본조달비용과 프로젝트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최근 중국 경제와의 통합정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유지할지 중국으로 아웃소싱할지를 보다 신중히 고려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 일부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정책이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문제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IMF 협의단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기업들이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를 기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투자를 꺼리는 현상은 이에 따른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도 극히 낮음

※ 외국인 증권 투자자에 의한 적대적 M&A 사례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음. 적대적 M&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의 중간관리자와 노동자의 지지가 전제되어야 함.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적대적 M&A가 일부 있었으나 결국 관리의 어려움으로 기업을 돌려준 사례가 있음(예: 인도네시아 발리은행)

- 출자총액 제한으로 투자가 저해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신규 창업이나 생산성이 높은 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 소지는 매우 낮음

□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투자를 저해하기보다는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미션단의 견해임

- 이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주식시장에서 "Korea discount" 가 줄어들어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임

- 이러한 맥락에서 지배구조가 취약한 재벌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일정 수준으로 개선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함

□ 한국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보다 시장중심적인 메카니즘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환영하며, 아울러 증권거래소가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

※ 지배구조 모범규준 리스트를 정해놓고 상장기업들이 이를 따르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

② 노동시장 구조 개선

-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 그간 노사분규에 대해 개입을 자제해 온 정부의 정책기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노사분규가 여전히 많으나 빠르게 타결되어 경제에 주는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공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어 임금 조정 (wage settlement) 건수도 줄어들었음

- 이제 정부는 다음 단계로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높은 수준의 정규직 고용보호” 문제를 다루어야 함
 - 해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 ※ 한국금융기관의 경우 명예퇴직금은 15년 근무자의 경우 22개월분의 월급으로 경쟁국의 2배 수준(홍콩 11개월, 런던 12개월)
 - 높은 퇴직금 수준은 동북아 허브로의 전환 가능성을 줄이며,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자 및 하이테크 서비스의 공급자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환경과도 부합하지 않음. 이러한 위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시장과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고용조정이 가능하여야 하지만, 고용조정비용이 높게 유지되는 한 새롭고 불확실성이 있는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음

- 높은 퇴직금은 비정규직을 늘리는 부작용도 야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동시장에는 이중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이러한 이중구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확실성을 높여 소비저하(예비적 동기의 저축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사회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음

- 국제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급여와 근무환경을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일견 그럴 듯하지만 확실히 틀린 것임. 1990년대에 스페인이 이 방안을 시도했으나 기업이 고용조정으로 대응한 결과 실업만 늘어났음. 한국의 경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임금 또는 근무조건의 동등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법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
-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주어진 보호를 축소하는 것임
 - 노동시장의 통합을 위해 스페인의 경험을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함. 비정규직 보호방안이 실패로 끝나자 스페인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계약의 효과는 인정(grandfathering)하되 신규 고용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이 정규직보다 낮으나 비정규직보다 높은 고용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고용창출, 노동시장 통합, 유연성 제고 등 대성공을 거둠
 -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스페인사례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실업보험,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하여도 환영함

3. 결론

- 종합적으로, IMF 협의단은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봄
 - 내수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2005년중 경기회복은 확고해질 것임. 문제는 이번 회복세가 얼마나 강할 것인가 이나, 과거 한국경제 경험을 볼 때 경기회복이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된 바 있음
-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측면의 경기진작책, 신불자 문제 해결의 가속화, 중소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선진화 등 정책을 시기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경기하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협의단은 반대로 생각함. 현재 한국의 경제 회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신뢰회복이며,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확실한 정책처방을 제시·시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임
- 한국정부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수립·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IMF 협의단은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음

(끝)